

## 탈냉전 이후 콜롬비아의 군사화와 자유권적 인권\*

강경희(제주대 정치외교학과)\*\*

- I. 서론
- II. 탈냉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
- III. 콜롬비아 군사화의 추진 요인
- IV. 콜롬비아의 자유권적 인권 현황
- V. 결론

### I. 서론

콜롬비아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구조적이고 간접적이며 모호한 특성이 있다. 이는 콜롬비아가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와 함께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민간통치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과 유관하다. 군부에 의한 인권침해의 경우, 다수의 남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군부의 직접통치와 물리적 폭력이 그 원인이었다면, 콜롬비아 군부는 주로 토호세력과의 유착이나 민병대 지원과 같은 간접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 콜롬비아 국가기구들은 민병대의 인권침해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모호한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Kyeong-Hee Kang(Che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khkang625@cheju.ac.kr), "Derechos humanos y militarización en Colombia a partir de la posguerra fría".

태도를 견지해왔다. 미국 등 선진국들과는 달리, 콜롬비아의 형식적 민주주의와 주기적 정권교체는 배제의 정치와 구조적 정치폭력을 동반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곤 하는 상황을 낳았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콜롬비아에서 자유권적 인권은 라틴아메리카 최후의 전쟁이자 최초의 마약전쟁(narcoguerra)이라 일컫는 콜롬비아 분쟁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냉전 시기인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콜롬비아의 좌파와 우파 게릴라, 민병대, 정부군 간의 분쟁은 탈냉전 이후 국제적인 마약테러와의 전쟁과 결합되어 ‘끝나지 않는 전쟁(una guerra de nunca acabar)’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Villalobos 2004, 9). 이러한 양상은 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의 게릴라조직들이 탈냉전 이후 평화협상을 통해 합법적 정치세력으로 변모한 점과 대조적이다. 콜롬비아 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은 실로 막대하여 1995-1997년 콜롬비아의 연평균 살인건수는 10만명 당 75.4명으로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30명의 2.5배에 이르렀다(Serje 2004, 106).<sup>1)</sup> 최근 들어 콜롬비아에서 살해와 납치건수가 약간 감소했다 하더라도 실종, 강제이주, 강간 등 인권침해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콜롬비아에서 자유권적 인권의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를 지속되는 무력분쟁 및 내전과 이에 따른 군사화(militarization)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3세계’의 군사화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결합되어 추진된다. 대내적으로는 소수 지배층과 반정부 세력 간 내전 및 게릴라전, 지배집단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피지배집단의 반란 진압, 인접한 적대국과의 군비경쟁,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통해 개인에 대한 군사통제 증대, 과거 정책의 연속성, 강력한 군부와 취약한 민주제도 및 민간기구 등이 군사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대외적 요인으로는 강대국

1) 또한 1994년 등록된 세계 총 납치 건수 중 절반 이상인 4,000건이 콜롬비아에서 발생했고, 멕시코가 800건, 브라질이 800건, 아르헨티나가 3건을 차지했다. 멕시코의 납치 건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7년에 900건, 1998년 초기 3개월 동안 450건에 이르러 콜롬비아 다음으로 납치 건수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의 개입, 국제시장에서의 무기판매, ‘주변국’의 국지적 분쟁에 대한 ‘중심부’ 국가의 개입, 국가간 이데올로기적·종교적 갈등, 강대국의 동맹체제 등을 들 수 있다(최장집 1989, 132-136). 콜롬비아의 군사화는 탈냉전 이후 내전과 게릴라전의 지속, 취약한 민주제도와 민간기구, 지방 토호세력과 정부군의 암묵적 협조관계 등과 같은 국내적 요인과, 파나마·베네수엘라·브라질·페루·에콰도르와 국경을 공유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미국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주도하는 빨란 콜롬비아(Plan Colombia)<sup>2)</sup>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콜롬비아의 군사화는 정부와 반정부세력간 평화협상을 어렵게 하고,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은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 흐름을 언급한 후, III장에서는 콜롬비아 군사화의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IV장에서는 콜롬비아의 자유권적 인권 현황을 낮은 수준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보안군·우익민병대·무장반군의 지속적 인권침해, ‘정의와 평화법’에 의한 면책특권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콜롬비아의 군사화와 자유권적 인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 II. 탈냉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

군사화와 인권 간의 관계는 민주체제 하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군사화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침해, 불안과 공포, 빈곤과 질병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전웅 2004, 42).<sup>3)</sup> 특히, 전쟁 시기에는 군사화와 인권이 상호 대립되는 경

2) 빨란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에 만연한 마약거래와 무장게릴라 활동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 콜롬비아 정부의 계획이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이와 관련해 저자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인간안보, 국제안보, 국가안보 등을 통합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국

향이 더욱 강해지며,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권 침해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또한 전쟁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의 양상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극대화하고 국내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애국주의 열기 속에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Ishay 1995, 467-473).

냉전 시기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 군사정권과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게릴라투쟁이 치열했던 국가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탈냉전 직후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는 민주화의 여파로 약화되었으나, 마약거래와 좌익반군의 활동이 빈번한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경우는 예외였다(Frühling 1998, 242). 즉, 탈냉전 이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이 마약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면서 두 국가의 군사화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La Jornada 2003a). 냉전기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군사개입의 목표가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 방지였다면,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군사개입은 국제테러리즘과 마약거래를 막고, 이민자 유입을 통제하며, 전략적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냉전기와 탈냉전 시기 미국 군사개입의 목표는 상이하더라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약화되었던 라틴아메리카 ‘군대’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점,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점 등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9·11테러 이후 개시된 대테러 전쟁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확산됨으로써 인권 및 개인적 자유권에 대한 침해현상도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애국법(Patriot Act)의 통과로 정부가 개인의 삶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법은 전자 감청권, 전국적인 수색영장 발부권, 범죄나 이민법 위반혐의 없이 1주일간 이주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 FBI의 개인기록 열람권 등을 연방정부에게 부여했다. 이 법은 2004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5년 7월 무기한 연장이 결정되었

---

가안보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많다(Gandasegui 2002, 245-246).

다. 인권단체들은 미국정부가 애국법을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적용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인권 및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과 지원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탈냉전 직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은 라틴아메리카로 대거 유입되는 유럽자본과의 경쟁을 수월하게 하고, 8억 인구의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미국은 한편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미-칠레 자유무역협정, 안데스지역구상(Iniciativa Regional Andina), 플랜 푸에블라-파나마(Plan Puebla Panamá)를 진행해왔고(Agencia Periodística de Información Alternativa), 다른 한편으로 북미지역의 안보와 이민문제 해결을 목표로 북미안보번영동맹(ASPAN: Alianza para la Seguridad y la Prosperidad de América del Norte)을 계획하고 있다(CIEPAC 2005).

이를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의 목표도 주로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물·석유 등 자연자원의 획득에 맞춰졌다. 총 10개에 이르는 라틴아메리카의 미군기지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주둔지역에서 미국 경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인도주의적 개입, 사회적 지원, 의료 및 환경 연구 등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의 주요 명분이었다.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까바냐스(Cabañas), 아길라(Aguila), 유니타스(Unitas), 씨엘로스(Cielos), 쟈트랄레스(Centrales), 누에보스오리손테스(Nuevos Horizontes), 플루비알(Fluvial)이라는 이름의 군부대를 주둔하였다. 또한 미국은 마이애미에 본부를 둔 미국남부사령부(Southcom: U.S. Southern Command) 지부를 미공군기지가 위치해 있는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열도, 엘살바도르, 에콰도르에 각각 아루바-꾸라싸웅(Aruba-Curaçao), 꼬말랍싸(Comalapsa), 만따(Manta)라는 군부대를 설치하였다(Petras 2001). 예컨대, 만따 부대는 안데스지역구상의 실현을 위해 2000년부터 엘살바도르에 주둔해왔다(Agencia Periodística de Información Alternativa).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에 주둔한 미군기지는 1999년 계약만으로 폐쇄된 파나마의 호워드(Howard) 공군기지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긴급 군사지원 정책의 전방작전기지로도 활용된다. 이를 위해 이 기지들은 최소 10년 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해상, 육상, 영공을 미국에 제공할 것을 허용했다.

최근 들어 군사적 목적에 따른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군사개입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콜롬비아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게릴라단체들이 코카인과 아편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이를 통해 활동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마약거래와 게릴라단체를 동시에 제어하는 군사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카르텔이 쿠바, 니카라과 등 사회주의 정권의 지원을 받는 좌파 게릴라집단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마약과의 전쟁도 마약카르텔이나 테러집단들보다 사회주의 정권과 좌파 게릴라집단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대결이 종식된 탈냉전 이후 미국은 마약거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약생산자뿐 아니라 마약거래업자, 마약소비자에도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군사적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비군사적 방법이 동원된 마약과의 전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은 대테러전쟁과 결합되어 다시 마약생산자에 초점을 맞춘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라틴아메리카 마약 및 테러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방식도 라틴아메리카 민간경찰의 합법적 기능에 의존하기 보다는 ‘군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민간경찰 대신 군대를 주요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찰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잔혹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인권침해 혐의를 비교적 덜 받는 군대가 미국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Amatangelo 2001).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정적 지원은 의도적

이든 비의도적이든 라틴아메리카 군대의 위상을 증진시키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위축되었던 라틴아메리카의 군대는 9·11테러 후 미국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마약테러와의 전쟁의 결과로 다시 강력한 지지기반을 얻게 된 것이다. 반면, 라틴아메리카 신생 민간정권들의 권력기반은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군사개입의 또 다른 결과는 ‘대륙의 군사화’이다. 미군기지 인근 국가들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 군사개입의 확대가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또한 군사화를 촉진하고 있어 대륙적 차원의 지역안보가 불안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지원 하에 추진되는 콜롬비아의 마약계털라 소탕작전의 경우, 인접국들은 마약계털라 소탕작전에 따른 난민 유입, 군대에 의한 폭력 확산, 마약 생산과 거래의 확산 등을 우려하면서 자국의 군사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등 주변국들의 군사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 2002).

### III. 콜롬비아 군사화의 추진 요인

#### III.1. 대외적 요인: 빨란 콜롬비아

##### III.1.1. 초기의 빨란 콜롬비아

현재 빨란 콜롬비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마약테러와의 전쟁과 결합되어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촉진하는 핵심적 축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처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었다. 초기 빨란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마약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사회·환경적 발전계획으로서 제기되었다. 초

기 계획은 군사전략보다는 평화전략에 통합되어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마약거래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중반 미국 클린턴 정부가 이 계획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목적과 구체적 시행방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1999년 9월부터 빨란 콜롬비아는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좌파 게릴라단체들과 우익민병대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으로 변모하였다.

초기 빨란 콜롬비아는 1998년 8월 3일 콜롬비아의 빠스트라나(Andrés Pastrana Arango) 대통령이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콜롬비아를 위한 마샬플랜(Marshall Plan for Colombia)’ 구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마약거래의 근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인권보호,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투자 증대 등을 위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이 논의되었다.<sup>4)</sup> 이 구상은 1998년 11월 빠스트라나 정부가 제안한 ‘평화구축을 위한 변화(Cambio para construir la paz): 1998-2002’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은 콜롬비아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경제, 사회, 환경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행동강령이 제기되었다. 첫째, 마약 경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둘째, 폭력 정도가 높은 지역들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난민 문제나 폭력행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셋째, 군대와 경찰이 마약 등 불법작물 관련 기업에 참여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파스트라나 정부는 빨란 콜롬비아를 구상하는 초기 과정에서 기업의 마약작물 불법 거래문제와 빈곤가정 부양을 위한 마약생산 문제를 분리하였다. 또한 이 계획은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모델이 억압→경찰→사법→투옥과 같은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폭력 및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예방적·교육적 내용’을 통한 개입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약과의 투쟁전략은 평화전략과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4)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수출국이다. 콜롬비아의 석유수출은 총수출의 30%를 차지하고 미국이 주요 수입국이다 (Cruz 2006).

견해를 토대로 1998년 12월 공식 발표된 초기 빨란 콜롬비아는 ① 경제·사회적 발전, ② 인도주의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 ③ 제도 구축, ④ 인프라 개선, ⑤ 환경보호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내전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콜롬비아 남부의 마약생산 지역에 적용된 후, 점차 다른 지역들로 확장될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99년 6월 5일 평화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쿠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베네수엘라의 자문단체들에게 소개한 빨란 콜롬비아도 평화전략을 동반된 동일한 목표를 담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생산과정, ② 인도주의적 고려, ③ 인간자본 보호, ④ 제도와 사회적 자본 발전, ⑤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⑥ 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Eugenia 288-289).

그러나 1999년 9월에 발표된 빨란 콜롬비아의 반마약 전략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강령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① 제한적 군사행동, ②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조제 살포를 통한 마약작물 박멸, ③ 마약작물의 무차별 제거, ④ 미국의 자문 역할, ⑤ 마약작물의 불법 이용에 따른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표 1>.

<표 1> 1999년 9월 전후의 빨란 콜롬비아 비교

1999년 9월 이전	1999년 9월 이후
1. 예방적·교육적 내용을 포함한 개입	1. 제한적 군사행동
2. 불법적 마약작물 이용을 대체할 대안적 발전프로그램 마련	2. 제조제 살포를 통한 마약작물 박멸
3. 기업의 불법적 마약작물 이용의 근절	3. 마약작물의 무차별 제거
4. 마약과의 전쟁에서 군대의 참여	4. 미국의 자문 역할 (개입은 안함)
5. 환경보호	5. 마약작물 불법이용에 따른 환경파괴 행위의 해결책 모색

출처: Eugenia 2004, 289.

### III.1.2. 미국 주도의 빨란 콜롬비아

마약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은 자국의 심각한 마약소비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 등의 마약생산에 있으므로 생산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게릴라조직들을 겨냥한 대테러 전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게릴라단체들이 마약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9년 9월 이후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계획된 빨란 콜롬비아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성향의 게릴라조직과 우익민병대 등을 소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2002년 집권한 우리베(Álvaro Uribe Vélez)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여하여 게릴라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아마존 지역을 공격할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한 우리베 대통령은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평화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은 빨란 콜롬비아를 지원하고 마약게릴라를 소탕하며 미국 해군 및 군사고문단을 진주시키기 위해 콜롬비아에 트레스에스끼나스(Tres Esquinas), 라란디아(Larandía), 푸에르토폰레기사모(Puerto Leguizamo)라는 세 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Agencia Periodística de Información Alternativa).

빨란 콜롬비아로 인해 2000년 현재 콜롬비아는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세 번째로 많이 받는 국가가 되었다. 2006년 현재 콜롬비아는 미국의 다섯 번째 군사지원국인데,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4배 이상 증대되었다고 추정된다. 2006년에만도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안데스 이니셔티브(IAD: Iniciativa Andina contra las Drogas)’의 일환으로 콜롬비아에 4억8천3백5십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고, 직접적 군사원조도 2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더욱이 미국하원은 콜롬비아에 대한 2천6백만 달

러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는데, 이는 3개의 DC-3 헬기 구입을 위한 것이다. 이 헬기는 콜롬비아 해상의 마약업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06년 3월 12일 선거에서 친미적 후보인 우리베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2006년 2월 27일에는 미국-콜롬비아 FTA가 조인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이기보다는 미국의 남아메리카대륙 전략의 주요 거점으로서 콜롬비아의 위상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추진된 미국의 지원은 총 47억2천9백만 달러와 안데스 이니셔티브를 위해 전달된 액수를 포함해 거의 7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빨란 콜롬비아의 애초 목적인 마약근절과 게릴라단체의 소탕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대신에 2006년 선거에서 우리베 대통령은 재선시키는 데 기여했다. 우리베 대통령은 당선 후 1991년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게릴라단체 소탕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베 대통령이 발표한 ‘빨란 콜롬비아 2007(Plan Colombia II)’에서는 ‘마약게릴라’ 대신 ‘테러리스트 활동’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반테러법<sup>5)</sup>도 의회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Cruz 2006).

### III.2. 대내적 요인

#### III.2.1. 사회세력들 간 뿌리 깊은 분파주의

탈냉전 이후 콜롬비아에서 군사적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역사·구조적 요인으로서 오랜 정치 분쟁의 역사에 의한 정치·사회 세력간 대립과 분파주의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콜롬비아 정치의 극단적 분파주의는 19세기 중반 이후 자유당(Partido Liberal)과 보수당(Partido Conservador)의 반목에서 유래된다. 특이한

5) 2003년 말 승인된 반테러 규약에 따르면, 군대가 영장 없이 개인을 체포하고, 주소와 사무실을 등록하고, 통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점은 이 정당 엘리트 간 반목이 정치적 차원을 넘어 정당들에 의해 동원된 지주와 농민들의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콜롬비아의 자유당과 보수당은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며 1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초기의 기본 틀을 고수하고 있다(González-Cárdenas 1997, 111-112). 이 정당들은 대립과 타협을 거듭하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과두제 공화국을 통치했을 뿐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형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Bushnell 1992, 11; Peeler 1990, 84). 이에 대해 형식적 민주주의론자들은 콜롬비아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래되고 안정적인 민주체제를 유지한 대표적인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와일드(Alexander W. Wilde)는 1910-1949년 콜롬비아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정치체제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과두제민주주의(oligarchical democracy)’라 규정하였다(Wilde 1978, 29-30).

전통적 양당제에 의한 ‘민주적’ 정치체제 확립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지배세력도 독립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즉, 대토지소유자들은 세대가 바뀔에 따라 커피농장주, 유통업자, 수출업자, 기업인, 은행가 등으로 스스로를 변모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이러한 과정은 용이했는데, 그 이유는 지주의 재출현(regeneración)을 통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는 1886년 헌법이였다(Leal 1989, 239). 이 과정에서 자유당과 보수당 동맹은 독립운동기 이미 존재했던 초기 단계의 제조업을 파괴하고 원료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는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였다(Peeler 1990, 74).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보수당과 자유당의 정치투쟁에 동원되었다. 동원된 농민들은 정당이테올로기와 상관없이 맹목적인 정당일체감을 체득하면서 추상적인 적과 투쟁하였다. 양당간 정치투쟁이 오랜 역사를 거쳐 진행됨에 따라 정당 소속 농민들 간에는 ‘전수된 증오(odios heredados)’가 싹트기 시작했고 ‘피의 복수(venganzas de sangre)’가 감행되었다(González 1997, 257). 그 결과 1860년, 1876년, 1885년, 1895년, 1899년에 자유당과 보수당간 대립은 연관된 사회세

력간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말 가장 대표적인 내전은 1899년 8월-1902년 11월의 천일전쟁(*Guerra de los Mil Días*)이었다. 집권 보수당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으로 발생한 이 전쟁은 자유당 반군세력의 파나마 공격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응해 보수당의 요청으로 1902년 11월 미국군대가 개입하면서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10만여 명의 인명손실은 물론 파나마와 파나마운하의 상실로 이어졌다. 보수당 주도의 자유당-보수당 타협정치는 1930년까지 이어지다가(Peeler 1990, 78),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1930-1946년에는 자유당이 집권하였고, 1946-1953년에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자유당이 분열하자 보수당은 자유당 온건파와 제휴하여 정치권력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자유당과 보수당간 헤게모니 투쟁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사태로서 1946-1958년의 대폭력(*La Violencia*)이 발생했다. 이 폭력사태는 1946년 자유당과 보수당의 갈등으로 시작된 후 1948년 4월 자유당 민주주의파인 가이판(*Jorge Eliécer Gaitán*)의 암살로 1948-1951년과 1955-1964년에 집중적으로 자행되었다. 자유당과 보수당의 단순한 정치투쟁으로 시작된 폭력은 점차 가족, 정당, 지역 사회세력들의 소속정당을 둘러싼 대폭력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폭력사태는 지향점도 목적도 없이 단지 공포와 테러만을 동반하며 20만-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인명손실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구분하는 정치·사회적 분파주의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었다(Leal 1989, 238-239).

대폭력을 계기로 보수당과 자유당은 오랜 정치폭력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1958년 새로운 방식의 정치협약인 국민전선(*Frente Nacional*)을 제도화하였다. 그 주요 특징은 두 정당 간 권력의 동등배분(*paridad*)과 교대제(*alternación*)이다. 1974년까지 지속된 국민전선은 16년간 4번의 정권교체를 성사시켰고 이후에도 현재까지 양당에 의한 정치적 독점은 지속되고 있다. 다빌라(*Andrés Dávila Ladrón de Guevara*)는 국민전선 형성을 계기로 콜롬비아의 과두제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었고 양당간 뿌리 깊은 적개

심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양당의 오랜 정치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분과주의는 하나의 견고한 정치문화로 자리 잡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콜롬비아의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Dávila 2000, 268-269).

### III.2.2. 탈제도적 정치운동의 확산

국민전선 정치협약은 콜롬비아 정치체제의 배제적이고 폐쇄적 성격을 고착화하였고, 타 정치·사회세력들의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무능했다. 협소한 민주적 공간으로 인해 보수당과 자유당 이외의 다른 정치·사회세력들은 제도적·합법적 방식을 통한 정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 대폭력 시기 조직된 자유당 소속의 게릴라들, 쿠바혁명을 기점으로 성장한 혁명적 게릴라조직들, 레닌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영향을 받은 게릴라조직들은 무장투쟁을 새로운 정치표현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의 정치·사회적 갈등은 탈제도화(desinstitucionalización)의 길을 걷게 되었다(Leal 1989, 239). 탈제도화된 정치·사회 세력들은 196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시노동자와 중산층의 증가와 쿠바혁명의 대륙적 확산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1970-198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sup>6)</sup>에서 소외된 농민층과 결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정부군에 의해 후원을 받고 마약거래업자들에게 자금지원을 받는 농민 자위대(*autodefensa*)나 민병대(*paramilitar*)들이 조직되었다. 이후 좌파와 우파 게릴라들 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직화된 범죄가 증대되었다. 탈냉전 이후 마약생산지대를 장악하기 위한 게릴라조직, 자위대, 민병대 간의 분쟁이 확대되면서 콜롬비아 영토 안에는 ‘또 다른 콜롬비아’(la otra colombia)

6) 콜롬비아는 이미 1974년 이후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적용하였다. 메디나(Medófilo Medina)는 이를 원시신자유주의(*protoneoliberal*) 단계라 칭한다(Medina 1999, 112)

가 확립되었다(Serje 2004, 91-92).

정부는 탈제도화된 정치·사회 세력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군의 무장력을 사용하거나 자위대와 민병대에 대한 장비 지원 등의 봉쇄전략을 펴는 한편, 1990년 12월 제헌의회 선거에 이어 민주적, 참여적, 다원주의적, 신연방주의적 볼리바르 사상을 포함한 1991년 7월 신헌법을 제정하는 유화전략을 시도하였다. 이 신헌법은 실용적 절충주의와 콜롬비아인의 정체성(colombianidad)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화정책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즉 일부 좌파계 게릴라조직들은 신헌법 공포 1개월 후 실시된 의회선거와 주지사선거에 후보들을 내세우지만 이들에 대한 정치적 암살이 발생하자 선거에 대한 기권 및 무효표 만들기 운동에 집중하였다(Fals 1995, 361, 379-380).

세르헤(Margarita Serje)는 콜롬비아에서 탈제도화된 정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근본적인 이유가 ‘약한 국가’, 즉 국가의 무능력에 있다고 본다. 공권력이 게릴라와 민병대의 불법적 무장화를 제어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의 엘리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병을 육성하였다(Serje 2004, 91). 또한 비야로보스(Joaquín Villalobos)는 콜롬비아 정부와 게릴라단체들 간 평화협상이 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에 비해 어려운 이유를 게릴라조직의 복잡성을 통해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엘살바도르에는 단 하나의 게릴라조직이 있었고, 따라서 단 하나의 평화협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콜롬비아에서는 근원과 성격이 다른 다수의 게릴라조직들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평화협상도 다양하고 정교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게릴라투쟁은 냉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탈냉전 이후 비교적 수월하게 평화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반면, 콜롬비아의 게릴라투쟁은 냉전이라는 외부적 요인 이외에도 국내의 정치폭력과 마약의 생산 및 유통 등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평화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Villalobos 2004, 10-11).

그 결과 탈제도화된 정치운동의 복잡성과 다면성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게릴라조직들 간 평화협상의 진행을 어렵게 하며, 지속되는 게릴라활동은 공공질서와 치안의 실질적 위기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게릴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무능력한 대응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약한 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통치불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IV. 콜롬비아의 자유권적 인권 현황

##### IV.1. 낮은 수준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롬비아에서는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국내 사회세력들 간 뿌리 깊은 분파주의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탈제도적 정치운동 등을 기반으로 사회의 군사화가 촉진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 주도로 최근 시행되는 마약테러와의 전쟁과 빨란 콜롬비아는 정부군과 게릴라조직, 민병대와 게릴라조직, 정부군·민병대와 농민집단들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자유권적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UN인권위원회는 콜롬비아의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인권침해의 책임자로서 정부군, 우익민병대, 무장반군을 지명했다. 이 위원회는 보안군과 국가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임의 처형, 적절한 사법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많은 억류 건들, 국가요원과 우익민병대 간의 공모 의혹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각국의 민주화와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기준으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 기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자유화 지수는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가 지수 1.0으로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들로 나타났다고, 벨리스와 파나마가 한국과 같은 1.5의 지수를,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지수 2.0, 브라질, 엘살바도르, 페루가 지수 2.5로 자유로운 국가들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3.0), 베네수엘라(3.5), 콜롬비아, 과테말라(4.0) 등으로 나타났다(Freedom House 2005).

#### IV.2. 정부군, 우익민병대, 무장반군의 지속적 인권침해

##### IV.2.1. 정부군과 우익민병대의 인권침해

군부는 헌법상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콜롬비아 군대는 현상유지를 바라는 소수의 경제 특권층에 의해 권력을 양도받아 범죄 행동을 저지르지만 면책특권을 누리기도 한다(Ramírez 1997). 지난 4년간 우리베 정부는 빨란 콜롬비아와 민주적 안보(Seguridad Democrática)라는 명분으로 군대와 경찰의 거리 배치 인원수를 25% 증가하고, 국방비 지출도 거의 배로 증대시키는 등을 통해 강력한 치안우선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무장반군단체들의 활동은 억제되고 범죄율은 저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살인사건은 3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세력은 우리베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간과하고, 군과 경찰 등 무력에 의존한 치안유지만 치중한다고 비판한다.

콜롬비아 군대는 1980년대 게릴라단체에 협력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나나 생산지역 농민들을 몰살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전과를 갖고 있다. 특히, 빨란 콜롬비아의 진행과 함께 콜롬비아 군대는 현격히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군에 의한 직간접적인 인권침해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군대는 무장반군 세력과 대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우익민병대 활동을 묵인함으로써 간접

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뿐만 콜롬비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결과 중 하나는 우익민병대 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익민병대는 우익정치인, 대지주, 농장주의 사주로 조직되었으며 마약거래, 토지 강점, 노동자와 농민의 갈취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군대이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콜롬비아 내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70%가 우익민병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익민병대는 2005년 무장해제되었다고 추측되었으나 대원들이 계속 징집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2005년 8월 25일 국제인권위원회는 2003년 무장해제되었던 우익민병대원들이 메데인(Medellin)에서 아직도 징집되고 있다고 콜롬비아 정부에 보고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우익민병대원들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가 많으며, 정부군이 이를 묵인하는 증거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국경지대에 주둔하는 콜롬비아 군대는 게릴라 색출을 명분으로 게릴라에 협조적이라 추정되는 파나마 인과 콜롬비아 인들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히 노조원, 인권운동가, 공동체운동가, 인디오공동체, 아프리카후예, 피난민, 그리고 갈등이 심각한 지역 거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이다. 2005년에 최소한 70명의 노조원과 7명의 인권운동가가 살해되었다. 2006년에는 인권운동가를 겨냥한 217건의 습격이 있었고, 30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122건의 살해위협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콜롬비아가 '사회적 노동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지적했다(Prensa Latina 2007).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살해와 실종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수도 2005년 상반기에만 최소한 1,050명에 이르렀다. 아프리카 후예들이 거주하는 히구아미안도(Jiguamiandó)와 꾸르바라도(Curvaradó)에 대한 정부군의 위협도 지속되고 있다. 2005년 10월 24일 안띠오끼아(Antioquia) 주의 치리고로도(Chirigorodó) 시에서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소속원이라고 고발당한 한 남자가 다음날 우익민병대에 체포된 후 살해당했다. 같은 해 4월 14-17일 까우까(Cauca)주의 또리

비오(Toribio) 인디오공동체에서 발생한 정부군과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전투로 10세 소년이 사망했다. 2005년 1월 19일 안띠오끼아 주 산카를로스(San Carlos) 시의 엘베르헬(El Vergel) 마을에서 7명의 농민이 우익민병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군인들이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고 살해 직전 군대가 희생자들 중 한명을 찾고 있었다. 2005년 8월 9일 바예델까우까(Valle del Cauca) 주의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 시에서 6명의 민간인이 우익민병대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지역의 우익민병대인 칼리마블록(Bloque Calima)은 2004년 12월 무장해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경찰은 이 살인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정부군이 자행하는 임의 처형에 대한 정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2005년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군은 임의 처형된 살인자들이 전투에서 사망한 게릴라라고 왜곡하고 있다. 2005년 7월 검찰은 안띠오끼아 주 다베이바(Dabeiba) 시에서 5월 8일 3명의 민간인이 8명의 군인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군대는 살해된 3명이 전투에서 사망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 게릴라라고 발표했다. 또한 우익민병대가 보고타에서 노동절 시위에 참여한 15세 소년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9월 22일 깔리(Cali)의 한 대학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이 우익민병대 요원이 발포하여 1명의 학생이 사망했다. 또한 2005년 5월 24일 정부군은 아라우까(Arauca) 주 사라베나(Saravena) 시에서 1명의 여성과 그 남편을 구류하였고, 보안군은 이 여성을 우익민병대 사병에게 인계하여 성폭행당하는 것을 묵인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빨란 콜롬비아 시행에 따른 정부군의 또 다른 인권침해는 남부지역의 마약작물 지대의 박멸작전에 따른 강제이주였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최소한 7천 명의 사람들이 뿌뚜마요(Putumayo) 주를 떠나 에콰도르로 피난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8천명의 사람들이 마약작물 박멸작전의 결과 국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02). 피난민의 수는 계속 증대되어

2004년에는 28만7천 명, 2005년에는 31만 명에 달했다. 2005년 6월 천3백 명의 아와(Awá) 인디오공동체 사람들이 군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전투를 피해 나리뇨(Nariño) 주를 떠났다. 강제이주에 반발해 안띠오끼아 주 산호세데아빠르따오(San José de Apartadó) 공동체는 군사적 갈등에 연루되지 않을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며 평화공동체(Comunidad de Paz)를 선언했다. 그러나 2005년 2월 21일 이 공동체 지도자를 포함한 8명이 군인출신의 남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군대와 우익민병대는 이 평화공동체가 전복세력이라고 평가했고, 우리베 대통령도 같은 해 3월 20일 이 공동체 지도자들이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협력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 IV.2.2. 좌익 무장반군의 인권침해와 더딘 평화협상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게릴라운동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무장반군 게릴라단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1960년대 결성된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제2반군인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국토의 40% 가량을 장악한 상태이다. 이들은 마약카르텔 조직으로부터 보호세 명목으로 군자금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1999년 10월부터 1964년 이후 진행된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해 평화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빨란 콜롬비아가 본격 시행되는 데 불만을 품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2000년 11월 평화협상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3개월 후인 2001년 2월 8일 정부와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평화협상이 재개되었고,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측은 평화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정부 비호를 받아 양민학살을 자행하는 극우민병대 조직인 콜롬비아자위대(AUC: 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의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요구를 정부가 거절하면서 양측의 대화가 결렬되었다가 2002년 11월 말 다시 재개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02).

또 다른 반군단체인 민족해방군과 정부의 평화회담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2002년 11월 정부와 민족해방군은 쿠바에서 접촉할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대화를 유지하다가, 12월 정부는 민족해방군과의 평화회담을 공식 재개했다. 2005년 9월 12일 민족해방군의 지휘관이며 프란시스코 갈란(Francisco Galán)이라는 별명을 가진 베르무데스(Gerardo Bermúdez)가 민족해방군과 정부의 평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석방되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16-22일 쿠바에서 정부와 민족해방군 대표의 평화협상이 성사되었다.

빨란 콜롬비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1년 초반,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미국의 군사지원 프로그램에 반발하며 빨란 콜롬비아의 주요 거점인 뿌뚜마요 남부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1). 2005년 8월 15일 민족해방군은 산탄데르(Santander) 북부의 떼오레마-콘벤씨온(Teorema-Convención) 도로에서 2명의 사제와 2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 같은 해 8월 23일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은 안띠오끼아 주 발디비아(Valdivia) 시의 팰로마스(Palomas) 마을에서 14명의 농민을 살해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20일 메따(Meta) 주 뿌에르토폴레도(Puerto Toledo) 시의 한 호텔에서 폭탄테러를 자행하여 3명의 민간인과 3명의 군인이 사망했고, 13명의 민간인과 11명의 군인이 부상했다. 같은 해 10월 3일 바예 델 카우카(Valle del Cauca) 주 플로리다(Florida) 시의 한 인디오마을에서는 3명이 폭탄테러로 사망했는데, 그 중 2명이 어린아이였다.

2005년 11월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 인질의 석방을 협상하기 위한 국제위원회 구성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말까지 인질과 죄수 교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과 민족해방군은 많은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2002년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납치한 전 대통령후보 베탄꾸르(Ingrid Betancourt)도 포함되어 있다. 인질수는 2004년에 1,402명이었고, 2005년에는 75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중 273명은 무장반군에 의해 억류되어 있고, 40건은 우익민병대에 의한 것이고, 208명은 책임자가 불분명하다. 2005년 1월 23일 민족해

방군은 나리뇨(Nariño) 주 사마니에고(Samaniego) 시의 공동체 지도자를 납치하였고, 같은 해 말까지 석방하지 않았다. 2005년 3월 31일에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초코(Chocó) 주 히구아미안도와 꾸르바라도의 아프리카 후에 공동체에서 일하는 5명의 인권운동가들을 납치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 IV.3. '정의와 평화법'에 의한 면책특권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관례가 되고 있다. 우리네 정부는 2005년 7월 22일 정의와 평화법(Ley de Justicia y Paz)을 비준했다. 이 법은 무장해체를 수락한 불법 무장단체 단원들에게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처벌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5년 말 이 법의 수혜자는 대부분 우익민병대원들이었으며,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의 경우는 30여 명에게만 적용되었다. 이 법 덕분에 극소수의 우익민병대원들만이 인권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무장해체된 대다수 민병대원들은 2003년 선포된 법령128에 따라 사면되었다. 또한 우익민병대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를 동조하거나 묵인했던 정부군들에 대한 기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7)</sup>

정의와 평화법에 따라 모든 우익민병대원들은 2005년 말까지 무장해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익민병대의 해체과정은 2005년 10월 들어 정부가 돈 베르나(Don Berna)라는 별명의 민병대장인 페르난도(Diego Fernando Murillo Bejarano)를 체포하면서 지체되었다. 이 민병대장은 2005년 4월 10일 베니페스(Orlando Benítez) 하원의원 살인에 연루되었다고 추정되었다. 콜롬비아자위대의 무장해체 과정은 2005년 11월 첫째 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재개되었다. 정부는 무장

7) 2001년 8월 발효된 국가보안법(Ley de Seguridad y Defensa Nacional)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정부군에 대한 면책특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은 위기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과 정부군이 권력을 이양받는다고 조항을 포함하여 작전의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정부군에 대한 검찰의 징계 및 수사권을 심각히 제한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2001년 개정된 형법(Código Penal)이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면책권을 제한하고 강제이주도 범죄의 일부로 유형화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전혀 살리지 않았다(Amnesty International 2002).

해제한 우익민병대원들을 민간정보망, 정부군작전 지원, 사립경찰, 사설안전요원 등 정보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것을 장려했다. 이러한 결정은 우익민병대가 시민생활에 재편입되어 개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우익민병대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 법은 진실, 정의, 보상의 측면에서 희생자의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이 법은 면책특권을 남용함으로써 용서와 망각(Perdón y olvido)을 중요하고 있다.

정부와 콜롬비아자위대의 협상 결과, 2005년 말 총 2만여 명의 우익민병대원 중 절반 이상의 무장해제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무장해제되었던 지역의 대원들은 계속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민병대와 정부군 간 유착의 증거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06).

2005년 7월에 1명의 육군중위, 3명의 군인, 1명의 민간인이 2004년 8월 아라우카(Arauca) 주에서 3명의 노동운동가를 살해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다. 또한 검찰은 2004년 4월 톨리마(Tolima) 주 까하마르카(Cajamarca) 시에서 1명의 아기를 포함해 5명의 민간인 살해 혐의로 6명의 군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고위 장교들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2005년 1월에 대법원은 2001년 발생한 첸게(Chengue) 대학살 혐의로 해군장교 1명을 기소하였으나, 이 장교는 수사를 거부했다. 이 학살에서는 최소 26명의 사람들이 군대와 공모한 우익민병대 작전에 의해 살해되었다. 2005년 9월 15일 미주인권재판소는 1997년 메따(Meta) 주 마삐리판(Mapiripán) 시에서 우익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49명의 농민가족들에게 콜롬비아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이 민간 사법체계를 통해 수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군법원은 정부군이 저질렀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독립적 사법권을 주장하였다. 2005년 4월 군법원은 2004년 3월 나리뇨(Nariño) 주 과이타리야(Guaitarilla) 시에서 7명의 경찰요원과 4명의 민간인 살해 책임을 지닌 12명의 군인들을 사면했다.

## V.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탈냉전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와 자유권적 인권 상황을 고찰하기 위해 콜롬비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콜롬비아는 빨란 콜롬비아를 통해 미국의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고, 1990년대 이후에도 게릴라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1964년 이후 현재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군사화에 따른 자유권적 인권 침해를 고찰하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콜롬비아 군사화를 촉진하는 외부적 요인은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전쟁의 세계적 확산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개입을 급속히 증대시켰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대 라틴아메리카 정책의 목표가 주로 경제적 이익에 맞춰져 있었다면, 9·11테러 이후에는 마약·테러와의 전쟁의 맥락에서 군사적 목적에 따른 개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콜롬비아 정부의 마약게릴라 소탕작전과 결합되어 콜롬비아의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빨란 콜롬비아도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촉진시키는 다른 요인이다. 애초에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한 빨란 콜롬비아는 군사전략보다는 평화전략에 통합된 경제·사회·환경적 발전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지원이 개시되면서 마약생산지역에 대한 군사행동과 제초제 살포 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베 대통령 재선 후 2006년 소개된 ‘빨란 콜롬비아 2007(Plan Colombia II)’에 따르면, 2단계 빨란 콜롬비아에서는 ‘마약게릴라’ 개념이 ‘테러리스트’ 개념으로 대체되고, 반테러법을 수용하는 등 군사전략적 측면이 더욱 확장되었다.

콜롬비아의 순환적인 정치폭력과 인권위기도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20세기에 들어 초반의 천일전쟁, 중반이 라 비올렌씨아, 중반 이후 현재까지 지속돼 온 내전 등 콜롬비아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전쟁과 폭력으로 만연된 불행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립 후 취약했던 콜롬비아 군대는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미국이 마약·테러와의 전쟁

에서 라틴아메리카 군대를 파트너로 선택하고, 빨란 콜롬비아도 평화전략보다는 군사전략으로 추진되면서 콜롬비아 군대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콜롬비아의 군사화 경향과 군대 역할의 재정립은 자유권적 인권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콜롬비아 군대는 소수의 경제 특권층의 권력을 양도받아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게릴라단체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농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게릴라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원, 인권운동가, 공동체운동가 등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또한, 콜롬비아 군대는 우익민병대원이 자행하는 인권침해를 묵인, 공모하거나, 마약작물 지대를 소개하기 위한 박멸작전을 수행하여 주민들을 강제 이주케 함으로써 간접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리고 군대 및 좌우익 게릴라집단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면책권의 부여 경향도 콜롬비아에서 자유권적 인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 군사화는 국내적 차원을 초월하여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군사화를 촉진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륙적 계획 하에 진행된 빨란 콜롬비아는 남아메리카의 재무장화(remilitarización)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군대는 군사독재 시기처럼 국내안보를 위한 책무를 다시 담당하게 된 것이다(La Jornada 2002).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베네수엘라, 파나마, 에콰도르, 브라질 등은 2003년 ‘군사화를 반대하는 제1차 대륙간 회담(Pirmer encuentro hemisférico frente a la militarización)’을 개최했다(La Jornada 2003b). 이 회담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군사화가 대자본, 초국적기업, 국제금융단체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화를 반대하는 대륙적 투쟁은 라틴아메리카 민중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륙의 탈군사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군사적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는 빨란 콜롬비아가 파나마의 주권을 침해하며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Gandásegui 2005).

## Abstract

A partir de la posguerra fría en América Latina, existía optimismo del mejoramiento de los derechos a la libertad gracias a la desmilitarización y el desarme y el achicamiento relativo del poder estatal en el proceso de la democratización. No obstante, se han aumentado violaciones de los derechos a la libertad y derechos humanos debido a la política exterior del realismo estadounidense y la guerra contra el terrorismo que emprendió con el 'acontecimiento del 11 de septiembre'. En este artículo se explora la cuest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Colombia enfocando los derechos a la libertad después de la posguerra y el Plan Colombia. El presente artículo concluye que se ha promovido la militarización colombiana por las siguientes razones: (1) La influencia global de la guerra contra el terrorismo encabezado por los Estados Unidos después del 11 de septiembre en 2001. (2) El Plan Colombia realizado no por una parte de la estrategia para la paz sino por la estrategia militar dirigida por los Estados Unidos. (3) La continua violencia política y la crisis de los derechos humanos en Colombia como elemento interno. Este artículo muestra la situación actual de los derechos a la libertad en Colombia enfatizando en el empeoramiento de los derechos políticos y de libertades civiles, la violación a los derechos humanos por los militares, paramilitares y fuerzas armadas, y la impunidad con la Ley de Justicia y Paz.

Key Words: Derechos humanos, Derechos a la libertad, Militarización, Colombia, Plan Colombia / 인권, 자유권, 군사화, 콜롬비아, 빨란 콜롬비아

논문투고일자: 2007. 05. 07

심사완료일자: 2007. 05. 18

게재확정일자: 2007. 05. 31

참고문헌

- 전웅(2004),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국제정치논총, Vol. 44, No. 1, pp.25-49.
- 최장집(1989), 「제2편 평화의 사회과학적 접근: 제8장 제3세계 군사화와 평화」, in 『한반도평화론』, pp.126-139.
- Agencia Periodística de Información Alternativa, “La militarización de América Latina”, <http://www.apivirtual.com>.
- Amatangelo, Gina(2001), “Militarization of the U.S. Drug Control Program”, in Tom Barry and Martha Honey(eds.),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Vol. 6, No. 17, May, [http://www.wola.org/Colombia/fpif\\_militarization.htm](http://www.wola.org/Colombia/fpif_militarization.htm).
- Amnesty International(2001), “Informes Anuales 2001 - República de Colombia”, [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04624870A106DF6985256D160060F342&c=COL](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04624870A106DF6985256D160060F342&c=COL).
- \_\_\_\_\_ (2002), “Informes Anuales 2002 - República de Colombia”, [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C526D6129558343685256D0100786760&c=COL](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C526D6129558343685256D0100786760&c=COL).
- \_\_\_\_\_ (2005), “Informes Anuales 2005 - República de Colombia”, [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ar&yr=2005&c=COL](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ar&yr=2005&c=COL).
- \_\_\_\_\_ (2006), “Informes Anuales 2006 - República de Colombia”, [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ar&yr=2006&c=COL](http://www.amnestyusa.org/annualreport_es.php?id=ar&yr=2006&c=COL).
- Bushnell, David(1992), “Politics and Violence in Nineteenth-Century Colombia”, in Charles Bergquist, Ricardo Peñaranda and Gonzalo Sánchez(eds.), *Violence in Colombia: The Contemporary Crisis in Historical Perspective*, Wilmington, Delaware: SR Books, pp.11-30.

- CIEPAC(2005), “El TLCAN plus también llamado ASPAN(Alianza para la Seguridad y Prosperidad de América del Norte)”, *Chiapas al Día*, No. 471, 27 de julio, [http://ciepac.org/bulletins/BOLETIN\\_2005/bolec471.htm](http://ciepac.org/bulletins/BOLETIN_2005/bolec471.htm).
- Calvo Ospina, Hernando(2005), “De Panamá a Venezuela: En las fronteras del Plan Colombia”, <http://www.rebelion.org>, 25 de febrero.
- Cruz, Iberto(2006), “EEUU elabora el 'Plan Colombia II' para su agresión contra Venezuela”, <http://www.rebelion.org>, 29 de marzo.
- Dávila Ladrón de Guevara, Andrés(2000), “Gobernabilidad democrática en Colombia: excesos y déficit desde el Frente Nacional”, in Julio Labastida Martín del Campo, Antonio Camou and Noemí Luján Ponce(coords.), *Transición democrática y gobernabilidad: México y América Latina*, Mé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 UNAM, FLACSO, Plaza y Valdés Editores, pp.259-282.
- Eugenia Castro, María(2004), “Plan Colombia, cultivos de uso ilícito, fumigaciones e impacto ambiental”, *Investigación y diseño*, noviembre, UAM-X, pp.287-301.
- Fals Borda, Orlando(1995), “La accidentada marcha hacia la democracia participativa en Colombia”, in Pablo González Casanova and Marcos Roitman Rosenmann(coords),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actualidad y perspectivas*, pp.361-383.
- Freedom House(2000-2005), [www.freedomhouse.org](http://www.freedomhouse.org).
- Frühling, Hugo(1998), “Judicial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in Felipe Agüero and Jeffrey Stark(eds.), *Fault Lines of Democracy in Post-Transition Latin America*, Boulder: North-South Center Press, University of Miami, pp.237-262.
- Gandásegui, Marco A.(2002), “Gobernabilidad y seguridad humana en el

- Plan Colombia”, in Darío Salinas Figueredo y Edgar Jiménez Cabrera(coords.), *Gobernabilidad y globalización: Procesos políticos recientes en América Latina*, México: Ediciones Gemika, pp.239-257.
- González, Fermín and Miguel E. Cárdenas(1998), “Partidos y crisis del sistema político en Colombia”, in Thomas Manz and Moira Zuazo(coords.), *Partidos políticos y representación en América Latina*, Venezuela: Nueva Sociedad, pp.111-138.
- González Fernán E.(1997), “La violencia política en Colombia como crisis de gobernabilidad: una mirada de larga duración”, in Darío Salinas Figueredo(coord.), *Problemas y perspectivas de la democracia en América Latina*, México: Universidad Iberoamericana, ALAS, Triana Editores, pp.249-274.
-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2002), “Bush Administration Policy in Latin America”, *IRC Americas Program*, <http://americas.irc-online.org/am/1835>, March 14,
- Ishay, Micheline(조효제 역)(2004), 『세계인권사상사』, 길.
- La Jornada(2002), <http://www.jornada.unam.mx/ultimas>, 10 de septiembre.
- \_\_\_\_\_ (2003a), <http://www.jornada.unam.mx/ultimas>, 10 de abril.
- \_\_\_\_\_ (2003b), <http://www.jornada.unam.mx/ultimas>, 6 de mayo.
- Leal Buitrago, Francisco(1989), “Colombia: un bipartidismo en crisis”, in Lorenzo Meyer and José Luis Reyna(coords.), *Los sistema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México: Siglo XXI, Universidad de las Naciones Unidas, pp.237-268.
- Medina, Medófilo(1999), “El neoliberalismo en Colombia y las alternativas de las luchas sociales 1975-1998”, in Margarita López Maya(coorda.), *Lucha popular, democracia, neoliberalismo: protesta popular en América Latina en los años de ajuste*, Venezuela: Nueva Sociedad, pp.111-128.
- Peeler, John A.(임혁백 역)(1990),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콜롬비

- 아,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서울: 새날.
- Petras, James(2001), “Empire-building in Latin America: U.S. military strategy”, <http://www.rebellion.org>, 27 de noviembre,
- Prensa Latina(2007), “Colombia, principal agresor de defensores de los derechos humanos”, <http://www.rebellion.org>, 15 de marzo.
- Ramírez Colina, Oswaldo E.(1997), “Los derechos humanos en Colombia”, <http://www.monografias.com/trabajos/derhumcol/derhumcol.shtml>.
- Serje, Margarita(2004), “Petróleo en tierras de nadie”, in Eduardo Subirats(coord.), *América Latina y la guerra global*, México: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89-114.
- Villalobos, Joaquín(2004), “Prólogo”, in Guedán, Manuel and Rubén Darío Ramírez, *Colombia, ¿La guerra de nunca acabar?*, España: Trama editorial, pp.9-20.
- Wilde, Alexander W.(1978), “Conversations among Gentlemen: Oligarchical Democracy in Colombia”, in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eds.), *Latin America: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s*,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28-81.